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 문제를 통해 살펴본 미일 동맹과 일본의 ‘의존적 자율성’ 확보

백 범 흡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前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기획자 註] 미일 양국은 지난 3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에 파병을 요청한 이후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의존적 자율성’ 이 지닌 의의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본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1. 미일 동맹의 구조적 성격과 일본의 외교 전략

일본에게 미국은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는 최종 안보 제공국이자, 미일안전보장조약¹⁾을 기초로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남북 3,000km에 달하는 일본의 방위를 폭 넓게 지원하는 핵심축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무력행사 제약과 독자 핵능력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다. 평범한 일본인들은 종종 ‘자위대는 못 믿지만, 미군은 믿는다’ 고 말한다. 일본의 대미(對美) 안보 의존 구조는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무장·핵능력 고도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더 강화되어 왔다.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체제²⁾ 하에서 지속되어 온 미국과의 ‘비대칭적 동맹(Asymmetric Alliance)’ 관계의 결정판이다. 일본은 대미 비대칭 동맹 관계를 전제로 한 (2개의 모순적 단어로 표현되는) ‘의존적 자율성 확보’ 를 추구해 왔다. 즉, 일본은 구조적 대미 의존을 지속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취해 온 것이다. 이 글은 일본의 모순적 전략이 최근 미일 협력의 심화와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 분석한다.

1)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미국-일본 간 동맹조약으로 일본이 국권을 회복한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1960년 1월 19일 신(新)조약이 체결되었다. 신(新)조약은 같은 해 6월 23일부터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3년 1월부로 우주에서도 적용키로 했다.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 주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과 사전 협의 없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즉각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밀약이 체결됐다. 조약의 기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무기한이다. 그리고 10조에 의해 조약 해지를 마음대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면 1년 뒤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2) 1951년 9월 8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단독 강화를 통해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한편, 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 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이날 체결된 2개의 조약에서 기인했다. 하나는 제2차 대전의 적이었던 일본과 48개 '연합국' 간에 맺어진 다자간 평화조약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과 일본 양자 간 안보조약으로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에 “일본 및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주둔시킬 권리” 를 허용했으며,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했다. 두 개의 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됐으며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2. 미일 동맹의 기능적 확장: 2026년 미일 정상회담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1)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 동맹의 경제·군사 통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 간 2026년 3월 19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군사안보와 경제안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미일 간 관계를 '신밀착(新密着)' 단계로 제도화한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군사와 경제 안보를 결합하는 형태로 동맹의 기능적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일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항하는 '통합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SM-3 Block IIA 요격미사일의 일본 내 생산량 4배 확대, 능동 레이더 유도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공동 생산 검토, Typhon(SM-6/SMRCF) 미사일 시스템³⁾ 일본 내 지속 배치, 일본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 돔(Golden Dome)' 구상 참여 공식화 등을 통해 '거부적 억지(Deterrence By Denial)'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일 간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동시에 대중, 대북, 대러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은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미국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와 함께, 미일 양국은 '미일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2025)'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건설(약 400억 달러)과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약 33억 달러) 등 총 1,090억 달러 규모의 2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또한 알래스카산 원유 도입 확대와 일본 내 석유 비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대중동(對中東)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미일은 태평양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Marcus Island)⁴⁾ 인근 심해에서의 희토류 포함 핵심 광물 공동 개발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3)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 미일은 2025년 합동군사훈련 계기 혼슈섬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 등에 임시 배치되었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약 1,600km)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타이퐁 시스템을 정례적이고 진전된 형태의 일본 배치로 공식화했다. 일본 배치 타이퐁 시스템은 중국 해안 지대와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다.

4) 미나미토리시마는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촌에 속해 있는 일본 최동단 도서로 면적 1.33km², 둘레 6km, 최고점 해발고도 9m 가량의 삼각형 모양의 작은 섬이다. 도쿄에서 약 1,850km 떨어져 있다. 1684년 스페인 제국 해군의 마닐라 함대가 발견했을 때는 무인도였다. 1886년 일본인 개척자들이 입촌하기 시작했으며, 1898년 일본 제국이 자국령으로 선포했다. 2차 대전 패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미국이 관리하게 되었다가 1968년 일본에 반환됐다. 2차 대전 직전 일본인 주민들이 본토로 疎開되어 다시 무인도가 되었지만, 일본 최남단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와 달리 미나미토리시마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어업활동이 가능하며, 자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갖는 '섬'의 지위를 갖고 있다. 안보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민간인의 거주를 불허하고, 해상 자위대, 기상청, 해상보안청 직원만 출입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미일 양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을 언급하는 한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 문제와 관련,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거 파병이 제약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자위대 파견 대신 경제·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역제안했다.

2) FOIP와 동맹 역할의 재정의

1991년 소련 해체 후 일본의 안보 우려 대상은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핵심 군사력이 혼슈 남서부와 규슈, 오키나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2010년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하고, 증강된 경제력에 힘입어 중국이 해공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자 중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공포로 발전했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에 더 밀착하는 한편, 중국의 라이벌이자 러시아와는 전통적 우호관계인 인도양 지역의 강대국 인도를 끌어들여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前) 총리가 2016년 8월 제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개최지인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이 출발점이었다. FOIP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FOIP 전략은 미·일·인·호(美日印濠)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외교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와 중국의 말라카 해협 좌우편 대양(인도양, 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한 해상합동군사훈련인 Malabar, 미·일·호 간 공동군사훈련인 Orient Shield, 미일 간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영역 군사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Keen Sword 등으로 발전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 해·공군력의 서태평양 진출 억제, 즉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군사 협력 시스템 일체화(예: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일본은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와 주일미군사령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방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OIP 전략과 QUAD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은 '전략적 계승'과 '실용적 재편' 이라는 2개의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QUAD를 해양 안보, 기술 표준, 공급망 안정 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무형 협의체'로 운영하려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일본이 더 많은 방위책임을 지고, 미국의 재산업화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요구해 왔다. 2025년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인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와 한층 더 밀착된 행보를 해 나가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2026년 3월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일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다자 안보·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일 동맹의 기능적 확장은 일본의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전쟁 등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 양면성을 갖는다.

3.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문제: 동맹과 자율성의 충돌

도서국가 일본은 국가 생존 문제와 직접 관련된 해상교통로(SLOC) 안전 확보를 영토 방위를 넘어 글로벌 해양 질서 유지 여부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진화하는 미일 동맹의 딜레마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하는 한편, SLOC 안전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생히 상기시켰다. 이란 전쟁은 미일동맹과 일본의 중동정책을 다 함께 시험함으로써, 일본의 대외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안보질서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난하지는 않은 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미일 결속을 우선시했다. 동시에 국제법 준수 및 중동 지역 안정이라는 원칙적 입장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베 내각 당시 일본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중재를 시도하며 국제무대에서 자율적 외교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⁵⁾ 하지만, 이번 이란 전쟁은 ‘아베의 유산’ 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극도 불안정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차단 가능성이 어떤 ‘사태’ 에 해당되는지가 일본 내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 식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산 에너지 공급 차단 가능성이 2015년 안보법제를 통해 도입한 ‘존립 위기 사태’ 나 ‘중요 영향 사태’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본의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석유의 경우 94-95%, 천연가스의 경우 11-13%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정 사태 발생 시 상기 두 개념의 실제 적용 여부가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립 위기 사태’ 는 한반도나 대만 해협 유사시와 같은 일본의 생존과 직결된 직접적 위협 상황을, ‘중요 영향 사태’ 는 일본의 생존에 간접적 충격을 주는 상황을 뜻한다. ‘중요 영향 사태’ 는 미군 등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물자 보급, 의료 지원 등이 폭넓게 가능해지는 법적 유연성을 허용한다. 이번 전쟁의 경우에는, 일본 헌법 9조의 평화주의 원칙과 국내의 반전 정서, 중동 석유 의존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들과의 경제·외교 관계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러한 다층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적 중재와 제한적 후방지원이라는 양면 트랙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문제와 관련, 일본은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했다. 첫째, 정당성의 딜레마이다. 자위대 파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5) 2010년대 아베 신조 내각 시기 일본은 단순히 미일동맹의 추종국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일정한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하는 외교적 주체로 나서려고 했다. 한국의 역대 진보 정부(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도 미국과 중국, 북한 등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법 위반’ 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는 순간 일본은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국제법상 허용 가능한 조치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향후 UN 등 국제무대와 대중동 외교에서 일본의 입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번 이란 공습의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외교적 활동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국내 정치의 딜레마이다. 일본 일부 야당과 진보 성향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UN 안보리 결의 없이 일방적 군사행동에 나선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제법 위반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장기적 불안정 심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혼란 격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만약 자위대가 파병돼 군사작전 중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일본 국내 여론이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해 급속히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될 위험성도 있다. 개헌을 목표로 하는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동맹과 국제공헌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와 자위대 피해 발생 시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적 계산 사이에서 서 있다.

셋째, 외교관계의 딜레마다. 자위대 파견 여부는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대이란 관계와도 연결된다. 일본 정부로서는 개입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헌법상 제약도 있는 관계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확보라는 명분하에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과 정보 제공, 기뢰 제거, 경계·감시 활동 등 비전투적 임무를 중심으로 한 분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란과의 오랜 경제·외교 관계에 대한 고려 또한 일본이 직접 전투나 공세적 군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 할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은 결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위기에 대해 ‘존립 위기 사태’ 적용을 회피하고, ‘중요 영향 사태’ 적용을 통한 제한적 개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동 정세의 급변과 불안정이 일본의 평화와 국가 안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를 근거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 확대, 해상 자위대의 정찰·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활동 강화, 자국 선박과 자국민 보호⁶⁾를 위한 자위대 파견 등 중동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단계적, 점진적 대응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대응은 군사적 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견 등 군사 부문 기여가 아니라, 상기와 같은 ‘관리된 기여(managed contribution)’ 로 결론 날 것이다. 이는 일본이 헌법적 제약과 국내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미일 동맹이 부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현실적 절충의 결과다. 일본의 이 선택은 향후 일본의 위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핵심 패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6) 영사(領事) 보호를 말한다.

4. 서해-동중국해의 ‘걸프(페르시아만)화’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페르시아만이 글로벌 석유, 천연가스 운송의 대동맥 역할을 하듯이 서해-동중국해는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와 물류 생명선이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으로 가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9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포함한 서해-동중국해 해역을 통과한다. 서해-동중국해는 페르시아만과 같이 육지와 도서로 둘러싸인 사실상 내해(Semi-enclosed Sea)다. 최근의 서해-동중국해 해역 내 갈등은 최근 필자를 비롯한 일부 한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이 ‘페르시아만화’라고 명명할 정도로 페르시아만 분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페르시아만이 미군이 주둔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과 이란 간 갈등선이라면, 서해-동중국해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일본과 중국 간 갈등선이다. 페르시아만이나 서해-동중국해 갈등선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지난 2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주한 미군 소속 F-16 전투기 10여 대가 한국 공군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100여 회나 출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벗어나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근접한 공해 상공까지 진출⁷⁾한 것은 미국의 주요 의도가 중국 견제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아부 무사⁸⁾와 대소 튼브를 비롯한 페르시아만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처럼, 서해-동중국해 해역도 관련 국가들 간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중첩 문제다. 한국의 이어도(제주도 남서방 149km 밖에 위치한 수중 암초<暗礁>) 종합해양과학기지나 센카쿠 열도(釣魚島), 동중국해 해저 유전 등의 관할권 또는 영유권문제 등과 관련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해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중국의 회색지대(Gray Zone) 전략, 즉 해경선이나 민병대 선박, 민간 어선을 동원한 실효적 지배 강화 시도는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군사충돌의 원인과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은 증강된 경제력에 힘입은 해·공군력 증강과 해상 활동 강화를 통해 서해-동중국해 해역을 외부 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내해’로 만들려고 한다. 다수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시각 또한 유사하다. 중국은 이 해역을 자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해공군력 투자를 강화해 왔다. 서해-동중국해의 ‘페르시아만화’가 심화될 경우, 소규모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는 글로벌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7) 주한 미군이 북한 억제라는 원래의 목적을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사회 내에는 한국이 미중 갈등과 분쟁에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8) 페르시아만의 섬인데, 이란과 UAE 간 분쟁 지역으로 이란이 실효 지배 중이다. 면적은 12.8km²로 한국 경남 통영시 소속 옥지도와 비슷한 크기이고, 인구는 2016년 기준 2,131명이다. 이란인들은 ‘녹색 땅’이란 뜻인 갭-사부주섬이라 부른다. 섬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10m의 할바산이다. 섬 중앙에 아부무사 공항이 있으며, 이란의 항공도시 반다르아바스와 정기 항공편이 오간다.

5.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이란 전쟁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대만 해협, 또는 한반도 유사시(有事時) 등 동북아시아 안보를 우선적으로 관찰, 고려해야 하는 한국에게 의미 있는 정책적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답변 시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일본 국내로부터 압력을 받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반성할 점이 있다’고 말했으나, 해당 발언의 철회 자체는 거부함으로써 대만 해협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고수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유사시’에 대한 법적 해석 문턱을 높게 설정하면서도 정치·외교적 해석의 여지는 남기는 ‘전략적 모호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이 공간을 활용하여 유사시 국내 반전 여론, 동맹국 미국의 전략적 기대, 중국과 한국, 북한 등 인근국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나 ‘중요 영향 사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미일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선택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이번 이란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시해 보면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 미일 동맹 강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이란을 포함한 중동국가들과의 실리적 관계, 에너지 공급 안전, 국제법 원칙, 국내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대만 해협이나 한반도 유사시에도 일본이 동맹국 미국의 군사적 요구와 지역 안정, 자국의 핵심 이익 간 모호성과 신중함 모두를 전략적으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해협 유사시 관련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태’ 발생 시 일본은 미국 및 인근국들과의 외교적 관계 관리, 중국과의 갈등 격화 방지, 일본 영토 및 국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영향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모호성과 신중함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유사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해석이나 겉으로의 발언을 과도하게 신뢰하거나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일본이 유사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치적·전략적 계산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유사시’에 대한 일본의 법적 해석이나 선언적 입장에 대한 표면적 해석보다는, 실제 정책 결정 과정과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관찰,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대응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한국 또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되 ‘유사시’를 곧바로 ‘개입’으로 연결시키지는 않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자 소개: 백범흠

백범흠은 외무고시를 거쳐 1993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0여 년 간 외교부 북핵기획단 서기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주제네바대표부 정무과장, 주중국대사관 총영사, 주다렌 영사사무소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으로 근무했다. 그는 중국청년정치학원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고,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과 우석대, 서울대에서 초빙교수(연구원)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관련 국가기관들에도 출강하고 있다. 백범흠은 외교부 입부 직전인 1993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했으며, 1998년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법학 석사, 2006년 경제외교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범흠은 유라시아와 함께 중국사, 일본사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 지정학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2026년 4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